

# 내년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또' 기한 넘기나... 남은 쟁점은?

## 업종별 차등적용 일단락...27일부터 금액 본격 논의 노동계, 1만2210원 요구...경영계는 동결 주장할 듯 구속위원 공식 해결해야...노정 입장차 커 진통 예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게 됐다.

하지만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불과 이틀 남은 데다 노동계가 26.9% 인상이라는 역대급 인상을 제시한 상황이라 사실상 기한 내 심의의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하고 새 위촉 절차에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간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

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최임위는 이달 29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뿐이다. 정부가 심의 기한을 법적으로 강제나 제재가 없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는 고용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고용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전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심의를 계속하는 '늑장 심의'가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올해 심의도 고시 일정에 맞춰 심의가 진행

되는 그동안의 관행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임위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 22일 7차 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되면서 비로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넘어야 하는 산은 있다. 바로 노사 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차이와 근로자위원 공식의 문제다.

노동계는 심의 시작 전인 4월 일찌감치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7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안은 잠정적으로 주장한 것보다 높은 1만221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6.9% 많은 금액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인상이나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하면 3월 발표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원도 부족하다"며 "내년도 적정 생계비와 평균 가구 소득원 수, 근로소득 총족출 등을 기초로 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대신 가구 생

계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27일 열릴 8차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26.9%를 인상하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근로자위원들의 최초 요구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노사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임위는 구속된 근로자위원 1명 및 공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던 2일 구속되면서 노·사·공 통수가 깨져, 주요 사안을 표결할 때 노동계가 불리한 상황이다.

현행 최임위 운영규정에 구속으로 인한 불참은 대리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 변경이 유력한 안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고용부가 21일 돌연 김 사무처장의 구속사유를 들어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해촉을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을 대신할 새로운 근로자위원으로 그와 함께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정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재위촉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임위 각 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정하면 대통령이 위촉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측은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이미 최임위 근로자위원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을 추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사용자 측이 추천한 사용자위원도 다 재가해주는데 근로자위원만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대로 김 위원장 추천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 김치 수입량 5월까지 전년비 21% '쾅쾅'

물가 고공행진 속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치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원재료 가격과 국내산 김치 가격 인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인데 이 추세라면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기록한 역대 최대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24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김치 수입량은 11만913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8787t에 비해 20.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김치 수입량은 26만3435t으로 전년(24만606t) 대비 9.5% 늘었다. 김치 수입 증가와 함께 수입액은 고풍을 영향이 겹치면서 1억694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김치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2021년 중국발 알몸 배추 파종으로 그해 급격히 줄었던 김치 수입량은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외식 수요 증가와 물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값싼 중국산 김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상 회복과 국내산 김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김치 수입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 30만6049t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대비 명절과 김장철 등이 있는 하반기 김치 수입이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다. 작년에도 하반기 김치 수입량은 14만2917t으로 상반기(12만5180t)보다 18.6% 많았다.

올 여름 폭염과 장마,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주요 김치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추, 양파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중국산 김치 수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국내 김치 제조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작년 대비 환율이 다소 하락하면서 중국산 김치 수입 가격은 되레 하락했다. 국내산 김치와 중국산 김

치 가격 격차가 4배 가까이 나면서 외식업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중국산 김치에 눈을 돌리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김치 수출은 1만8795t으로 지난해(1만8827t)와 비슷한 수준이다. 환율과 가격 인상 영향으로 수출액도 6651만 달러로 작년(6550만 달러)과 별 차이 없다. 최근 몇 년간 한류와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열풍으로 특수를 누렸으나 이마저도 잠잠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량은 4만1120t으로 전년(4만2544t) 대비 3.3% 줄었다. 수출액도 1억4082만 달러로 전년(1억5991만 달러)보다 11.9% 감소했다. 7년 만에 김치 수출량과 수출액이 줄어든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2년 연속 이어질 수 있다.

중국산 김치가 시장을 점령하면서 위생 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국내산 김치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농축수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 중 하나가 배추 김치다. 적발된 업체들 대부분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수입 김치에 대한 식품위생관리체계인 '해썹(HACCP)' 인증평가를 확대했다. 지난해10월부터 김치 수입량 5000t 이상인 해외제조업소는 HACCP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impfood.mfds.go.kr)를 통해 수입 김치 제품의 제조국과 업체, 수입업체, 원재료 정보 등을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입 김치의 원산지 위반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름철 일조량 감소와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응해 배추와 무, 양파 등의 정부 비축과 계약 재배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외식업계, 여름 시즌 신메뉴·프로모션 쏟아진다

외식업계가 다시 돌아온 여름 시즌을 맞아 신메뉴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콘셉트의 메뉴를 출시하고, 브랜드 전용 모델을 활용한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이는 등 새로운 계절을 맞아 다채로운 메뉴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도미노피자는 지난 16일 신제품 '치즈 크래프트 샌드 피자'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나폴리 도우 위에 썬 도우를 쌓아 바삭함과 쫄깃함이 매력인 샌드도우를 사용했다.

최근 MZ 세대가 열광하는 대파 크림치즈를 도미노피자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대파 베이컨 크림치즈 무스를 도우 사이에 가득 넣었다.

이와 함께 치즈 풍류, 모짜렐라 등을 사용해 진한 치즈 맛을 자랑하며, 그릴드비프, 새우 등 여러 토핑도 한입 가득 경험할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도 새로운 브랜드 모델 뉴진스를 활용한 프로모션과 신메뉴 출시에 한창이다. 이달 1일 선보인 '맥크리스피&맥스파이스 핫 앤 치즈' 2종은 모델 뉴진스를 상징하는 도

끼 캐릭터와 맥도날드의 상징인 골든 아치 로고 등을 새긴 스페셜 패키지에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신제품 중 '맥크리스피 핫 앤 치즈'는 지난해 출시 이후 인기 반열에 오른 맥크리스피 클래식 버거를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으로, 매콤한 통닭다리살 패티와 스파이스 치즈 소스의 조화로 매콤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더운 여름철이 성수기인 카페 업계도 여름 맞이에 분주하다. 스타벅스는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을 겨냥해 상큼한 과일을 활용한 신제품 3종을 지난 13일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음료는 피치 요거트 블렌디드, 피스타치오 아보카도 초콜릿 프라푸치노, 피치 딸기 피치오 등 3종으로 복숭아, 아보카도, 딸기 등 다양한 과일을 활용해 달콤하고 시원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전국 주요 골프장과 휴게소, 워터파크 등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시설에서 신메뉴를 선보인 브랜드도 눈에 띈다. CJ프레시웨이



는 주요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뜨끈한 매력으로 원기 회복을 돕는 보양식 메뉴 3종을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이 시작되면서 외식업계의 신제품 출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 "이자 내 줄테니 더 살아줘요"... 세입자 모시는 집주인

### 전셋값 급락으로 역전세난에 이어 역월세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일부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불잡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해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내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증금 하락분만큼 이자를 세입자에게 매달 지급해서라도 기존 세입자와 계약하려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둘러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공공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며 "만기가 돼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역월세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셋값 급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놓인 집주인이 오히려 이자 형식으로 월세를 내주는 '역월세' 단지가 늘고 있다.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단지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을 깎아주는 수준을 넘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역으로 월세를 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경우 2021년 7월 12억·12억5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으나, 이달 현재 신규 계약 전셋값은 9억3000만원~9억8000만원 선이다.

2년 전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은 시세 하락분 3억원 가량을 임차인에게 내줘야 한다.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가운데 절반가량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5205건 가운데 6월까지 동일 단지·주택형·층에서 1건 이상 거래된 3만7899건의 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2만304건(54%)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역전세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구로, 조사 대상의 63%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내려앉았다. 이어 ▲동작구(62%) ▲서초구(61%) ▲은평구(60%) ▲강북·관악구(각 59%) ▲강남(58%) 등이 뒤를 이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거래의 보증금 격차는 평균 1억152만원에 달했다. 집주인이 갹신 또는 신규 계약을 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평균 1억원 이상, 총 2조10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준 셈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사이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아파트 228조원을 포함해 3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계약이 종료(계약기간 2년 기준)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될 지난해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153조9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즉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총액이 302조17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된 거래액 중 가장 많다. 또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750조2000억원의 40.3%, 가계신용 1835조9000억원의 16.3%에 해당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난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고금리 기조가 여전히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지역에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예정돼 전셋값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강남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3375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8월 서초구 래미안 원베네딕(2990가구)과 내년 1월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6702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13.5% 하락한 상황"이라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